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습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헌법

1.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을 헌법개정으로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 ④ 현행헌법 전문에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는 규정은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한 것이다.
- ⑤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2.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하는 법령 조항은 아직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 ②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시행령 조항은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 ④ 직장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그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구체적인 취업의 기회를 가지거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 있어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결정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⑤ 사회적으로 유해한 성매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성판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헌법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은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
- ㄴ. 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었다면 의제가 되기 전이라도 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ㄷ. 국회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 ㄹ.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지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 없이 국회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ㄹ

4.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62년 제3공화국헌법부터 결산·회계감사, 직무감찰을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 ② 헌법에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감사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④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기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다른 독립기관들의 자율입법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은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 5.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lt;보기&gt;에서 모두 고르면?

&lt; 보 기 &gt;

- ㄱ.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한다고 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ㄴ.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단순히 법률에서 그것의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ㄷ.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법률 조항이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을 주는 경우,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 ㄹ.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정도는 그 객체가 지닌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6. 선거권 및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권의 제한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 ② 범죄자에 대해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해야 한다.
- ③ 선거의 공정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 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포괄적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당내경선은 공직선거 자체와는 구별되는 정당 내부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고,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입법자가 사전투표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국민의 선거권의 행사 등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되게 반영하도록 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7.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해치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모든 공직에 임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 ②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에 맡기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당으로 하여금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한 것으로 당내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③ 오늘날 공직의 구조 및 공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것이고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한 직무상의 높은 수준의 엄결성은 여전히 강조되므로 엘리트적 면모와 사회적 명예직으로서의 공직 인식은 여전히 요구된다.
- ④ 국가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 선고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을 곧바로 당연퇴직하도록 하더라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공무원의 생활보장의 가장 일차적이며 기본적인 수단은 ‘그 일자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에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 8.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lt;보기&gt;에서 모두 고르면?

&lt; 보 기 &gt;

- ㄱ.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모두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ㄷ. 대법관회의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ㄹ. 재판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ㅁ. 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ㄹ, ㅁ

9.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청구권은 실체적 권리의 구제를 위해 권리구제 절차의 제공을 요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인 제도 형성을 필요로 한다.
- ②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재판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 할 것은 당연한 전제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청구권에 포함된다.
- ③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8조는 기피신청이 갖는 소송절차의 정지효를 제한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관을 배제하고 다른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고자 하는 기피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④ 사법기관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 등을 의미하는 사법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재판절차를 형성할 때에는 사법자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고,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조화시켜야 한다.
- 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10.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 ②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일정한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구「국가보안법」 조항은 개인의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 판단을 그 고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 특히 침묵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반행위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사죄광고의 강제는 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

11.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다.
- ②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한 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국가는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 ③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학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국·공립대학교의 대학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할 수 없다거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헌법 제22조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대학이 학생의 선발 및 전형 등 대학입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을 내세워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대학의 자율권은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⑤ 학습자로서의 청소년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와 관계없이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적 보호의 근거를 헌법 제31조제1항이 규정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찾고 있다.

12.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호하여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② 광역시 청사 앞 잔디마당을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개방된 공간으로 하면서도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한 잔디마당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 조항은 청구인들이 잔디마당을 집회 장소로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
-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회견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한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④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허가 없는 옥외집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지만, 그에 이르지 않는 헌법 제21조제2항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 ⑤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없다.

13.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매권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중 ‘필요 없게 된 경우’는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여 문언상 그 의미가 비교적 명백하다.
- ②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원소유자의 재산권의 존속보장이라는 사익과 공익사업 시행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공익을 형량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불명확한 법률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은 적어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야 인정될 수 있고, 이 규정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발생한 이후’의 시기에 행해진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상조업은 물품 사재기 및 하위 판매원의 무한 확장에 의한 폐해가 없거나 미미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 다단계판매의 성립요건을 모호하게 규정하여 상조업체도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
- 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각령(閣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구「군인보수법」 제17조 중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부분은 전시·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4. 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 폐회 중인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③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 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행 공권력의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을 뿐, 선행 공권력의 행사에 아무런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②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③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조약과는 달리 법적 효력 내지 구속력이 없는 합의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항의나 비판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비구속적 합의로 인하여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16.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국인등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② 행정소송에 심리불속행제도를 적용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구「관세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④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⑤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7.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유치장에서 불충분한 차폐상태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어렵게 하는 면이 있으나, 구금의 목적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볼 수 없다.

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규정은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나오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ㄷ. 금지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8.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이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재판관 직무대행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함이 상당하다.
- ④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탄핵심판사건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
- ⑤ 헌법재판소는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형량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19.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정에 있어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되도록 제정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②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은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 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③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각하를 하여야 할 사건이라면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없다.
- ④ 위헌법률심판에서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 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나 그 효력 유무를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 될 경우,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20.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② 전직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 ③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지며,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이 된다.

21.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가. 헌법사항에 관하여 형성되는 관행 내지 관례가 전부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력 있는 헌법규범으로서 인정되려면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만이 관습헌법으로서 성문헌법의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나.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다.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관습헌법은 헌법의 일부로서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으며,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된다.

마. 관습헌법은 형식적인 헌법개정 방법에 의하지 않고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사멸은 인정되지 않는다.

	ㄱ	ㄴ	ㄷ	ㄹ	ㅁ
①	X	O	X	X	O
②	O	X	O	X	O
③	X	O	X	O	X
④	X	O	O	O	X
⑤	O	O	O	X	X

22. 적법절차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인에 대한 추정판결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철수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인들에게 통보한 다음 개성공단 전면중단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응한 북한의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국민들 전원을 대한민국 영토 내로 귀환하도록 한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
- 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지만, 헌법 제12조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23.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②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③ 당구장에 대한 출입규제 내지 봉쇄는 법률 또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의 범위명령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은 모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결국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 ④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예외적 허용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⑤ 대한적십자사가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4.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기배아는 형성 중인 생명이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사자(死者)도 인격적 가치의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의 지위에서 행정처분의 주체가 되는 경우, 재개발사업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자 내지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에 있어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므로 「행정심판법」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 ④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2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이다.
- ②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③ 변호사의 업무는 다른 어느 직업적 활동보다도 강한 공공성을 내포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이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④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부착조항은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부착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며,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 ‘위치 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한다.
- ⑤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경 제 학

- 케인즈의 소비함수가  $C = 50 + 0.8(Y - T)$ 일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C$ 는 소비,  $Y$ 는 GDP,  $T$ 는 조세,  $(Y - T)$ 는 가처분소득이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계소비성향은 항상 0.8이다.
  -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항상 증가한다.
  - 가처분소득이 없어도 소비는 0보다 크다.
  - 가처분소득이 10 증가하면 소비는 8 증가한다.
  - 이 소비함수에서는 한계소비성향이 평균소비성향보다 항상 크다.
-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지만 1보다는 작은 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 재화는 사치재이다.
  -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이 재화를 더 많이 구매한다.
  - 이 재화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 수요량의 증가 속도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 소득이 1% 증가할 때 수요량은 1% 이상 증가한다.
- 반도체 산업의 노동공급곡선은  $L_s = 10,000 + W$ 이고, 노동수요곡선은  $L_d = 40,000 - 4W$ 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8,000으로 설정할 때, 고용량의 감소분으로 옳은 것은? (단,  $L$ 은 고용량,  $W$ 는 단위임금이다)

  - 0
  - 2,000
  - 4,000
  - 6,000
  - 8,000

-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근로자와 기업이 2%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대하였으나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1%로 나타났다. 이때 관찰할 수 있는 단기적 현상으로 옳은 것은?

  - 고용과 산출 모두 감소한다.
  - 고용은 증가하지만 산출은 감소한다.
  - 고용은 감소하지만 산출은 증가한다.
  - 고용과 산출 모두 증가한다.
  - 고용은 변하지 않고 산출만 증가한다.
- 어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은  $\frac{Y}{X}$  이고, 항상  $X$ 재를  $Y$ 재의 2배만큼 구입한다.  $X$ 재의 가격이 200원일 때,  $Y$ 재의 가격으로 옳은 것은?

  - 100원
  - 200원
  - 300원
  - 400원
  - 500원
- 완전경쟁시장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산요소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 비용불변산업임을 가정한다)

  - 시장수요곡선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 단기의 시장공급곡선은 개별 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 기업의 진입을 고려한 장기의 시장공급곡선은 단기에 비해 탄력적이다.
  -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 시장수요곡선의 높이는 소비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과 동일하다.
-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빅맥(Big Mac)의 가격은 5,400원이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빅맥의 가격은 4.5달러이다. 현재 시장환율은 1,250원/달러이다. 빅맥가격으로 구한 구매력평가 환율을 사용하여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를 평가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현재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원화가치는 4% 저평가되어 있다.
  - 원화가치는 4% 고평가되어 있다.
  - 원화가치는 5% 저평가되어 있다.
  - 원화가치는 5% 고평가되어 있다.
  - 빅맥가격으로 구한 구매력평가 환율과 현재 시장환율은 동일하다.

8. 어느 독점기업은 Y재만을 이용하여 X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기업의 생산함수는  $Q_X = \sqrt{Y}$ 이다. X재 시장의 역수요함수는  $P_X = 60 - \frac{1}{2}Q_X$ 이고, Y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단위당 2에 거래된다. 이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으로 옳은 것은? (단,  $P_X$ 는 X재 가격,  $Q_X$ 는 X재 생산량이다)

- ① 11
- ② 12
- ③ 13
- ④ 14
- ⑤ 15

9. 완전경쟁시장에서 일반적인 장·단기 비용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기총비용곡선은 장기총비용곡선과 한 점에서만 접한다.
- ② 단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은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 ③ 단기평균비용곡선은 장기평균비용곡선과 한 점에서만 접한다.
- ④ 단기와 장기의 총비용곡선이 접하는 산출량에서 단기와 장기의 평균비용곡선도 접한다.
- ⑤ 단기와 장기의 총비용곡선이 접하는 산출량에서 단기와 장기의 한계비용곡선도 접한다.

10. 리카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지출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정액세로 조달되는 경우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경우가 동일하다.
- ② 리카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고 저축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동일해야 한다.
- ③ 소비자들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있는 경우 리카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리카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을 지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0보다 커야 한다.
- ⑤ 민간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자산이 아닌 부채로 인식한다.

11. 다음은 어떤 경제의 거시경제 모형이다.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룰 때, 균형이자율( $r^*$ )과 균형국민소득( $Y^*$ )으로 옳은 것은?

$$Y = C + I + G \text{ (생산물시장의 균형)}$$

$$C = 100 + 0.8(Y - T)$$

$$I = 150 - 600r$$

$$G = 200, T = 0.5Y$$

$$M^d = M^s \text{ (화폐시장의 균형)}$$

$$(M^d/P) = 2Y - 8,000(r + \pi^e)$$

$$M^s = 1,000$$

$$P = 1, \pi^e = 0$$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T는 조세, I는 투자,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 P는 물가,  $\pi^e$ 는 기대물가상승률,  $M^d$ 는 명목 화폐수요,  $M^s$ 는 명목화폐공급이다)

	$\underline{r^*}$	$\underline{Y^*}$
①	2.5%	600
②	5%	700
③	7.5%	800
④	10%	900
⑤	12.5%	1,000

12. 다음은 두 경기자(1, 2)의 전략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구조이다. 경기자 1은 A와 B라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자 2는 C와 D라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경기자 1이 먼저 전략을 선택하고 경기자 2는 이를 관찰한 후 자신의 전략을 선택할 때, 부분게임완전균형에서 경기자 1과 경기자 2의 보수 조합으로 옳은 것은? (단, 보수 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숫자는 경기자 1의 보수, 두 번째 숫자는 경기자 2의 보수를 나타낸다)

		경기자 2	
		C	D
경기자 1	A	(4, 4)	(0, 6)
	B	(2, 2)	(-1, -1)

- ① (-1, -1)
- ② (0, 6)
- ③ (2, 2)
- ④ (4, 4)
- ⑤ (4, 6)

## 13.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 ②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 ③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 ④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실시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 ⑤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14. 어느 독점기업의 역수요함수가  $P = 100 - Q$ 이고 한계비용은 50이다. 이때 한계비용이 하락하여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10단위 증가하였다면, 한계비용의 감소분으로 옳은 것은? (단,  $P$ 는 가격,  $Q$ 는 수요량이다)

- ① 5
- ② 10
- ③ 15
- ④ 20
- ⑤ 25

## 15.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연금과 같은 고정소득을 받는 자들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
- ②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금전을 대출해 준 채권자의 대출자산 가치를 떨어뜨린다.
- ③ 예상된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는 채권자가 인플레이션 발생을 예상하여 높은 명목이자율을 책정함으로써 손실을 피할 수 있다.
- ④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 ⑤ 예상된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은 같다.

16. 두 재화( $X$ ,  $Y$ )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어느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x, y) = \min\{5x + 4y, 4x + 5y\}$ 이다. 이 소비자의 소득은 100,  $X$ 재의 가격은 2,  $Y$ 재의 가격은 5이다.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극대화를 달성했을 때, 이 소비자의 효용수준으로 옳은 것은? (단,  $x$ 와  $y$ 는 각각  $X$ 재와  $Y$ 재 소비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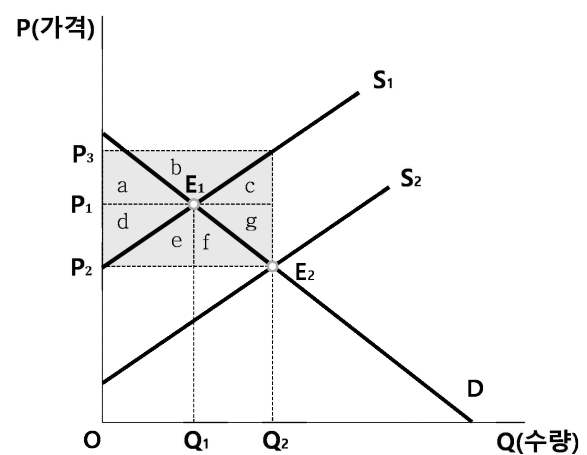
- ① 100
- ② 150
- ③ 200
- ④ 250
- ⑤ 300

17. 완전경쟁시장에서 어느 기업의 단기총비용곡선이  $TC = Q^3 - 12Q^2 + 105Q + 200$ 이고 재화의 시장가격( $P$ )이 165라고 할 때, 단기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 기업의 생산량으로 옳은 것은? (단,  $TC$ 는 총비용,  $Q$ 는 생산량,  $P$ 는 시장가격이다)

- ① 6
- ② 7
- ③ 8
- ④ 9
- ⑤ 10

## 18.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실질이자율이 상승하여 해외투자가 위축된다.
- ②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실질이자율이 하락하여 민간저축이 위축된다.
- ③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실질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위축된다.
- ④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실질이자율이 하락하여 민간투자가 위축된다.
- 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실질이자율이 하락하여 소비지출이 위축된다.

19. 다음은 정부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과 후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S_1$ 은 보조금 지급 전 공급곡선,  $S_2$ 는 보조금 지급 후 공급곡선,  $D$ 는 수요곡선,  $E_1$ 은 보조금 지급 전 균형점,  $E_2$ 는 보조금 지급 후 균형점이다)

- ① 보조금 지급 후 생산자가 최종적으로 수취하는 가격은  $P_3$ 이다.
- ②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생산자잉여의 증가분은  $a+b$ 이다.
- ③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감소분은  $c+g$ 이다.
- ④ 보조금의 크기는  $a+b+c+d+e+f+g$  이다.
- 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자잉여의 증가분은  $a+d+e+f$ 이다.

20. 소비자 A, B로만 구성된 경제에서 어느 공공재에 대한 소비자 A의 수요함수는  $P_A = 150 - Q$ 이고 소비자 B의 수요함수는  $P_B = 250 - 2Q$ 이다. 이 공공재의 한계비용이 100원일 때, 사회적 최적공급량과  $P_A$ ,  $P_B$ 로 옳은 것은? (단,  $P_A$ 는 A가 지불하는 가격,  $P_B$ 는 B가 지불하는 가격,  $Q$ 는 수요량이다)

	최적공급량	$P_A$	$P_B$
①	100	50	50
②	100	75	25
③	100	25	75
④	150	25	75
⑤	150	50	50

21.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함수는  $Q_d = -P + 500$ 이고 공급함수는  $Q_s = 2P - 100$ 이다. 정부가 스마트폰 1대당 15만원의 물품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했을 때,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조세부담의 크기로 옳은 것은? (단,  $Q_d$ 는 수요량,  $Q_s$ 는 공급량,  $P$ 는 가격이다)

- ① 0
- ② 2
- ③ 5
- ④ 10
- ⑤ 15

22. 한 국가가 재정적자를 늘릴 때, 그 나라의 경제상의 변화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투자와 민간 저축은 변하지 않음을 가정한다)

< 보   기 >

ㄱ. 순자본유출은 증가한다.  
 ㄴ. 순자본유출은 감소한다.  
 ㄷ. 순수출은 감소한다.  
 ㄹ. 순수출은 증가한다.  
 ㅁ. 순자본유출과 순수출은 서로 무관하다.

- ① ㅁ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23.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생산함수로 옳은 것은? (단,  $Y$ 는 산출,  $F$ 는 생산함수,  $A$ 는 총요소생산성,  $L$ 은 노동,  $K$ 는 실물자본,  $H$ 는 인적자본,  $N$ 은 자연자원,  $\gamma$ 는 0보다 큰 임의의 상수이다)

- ①  $Y/L = AF(1, K/L, H/L, N/L)$
- ②  $Y/L = AF(1, K/L, H, N)$
- ③  $Y/K = AF(Y/L, 1, H/L, N)$
- ④  $Y/L = AF(\gamma L, \gamma K, \gamma H, N)$
- ⑤  $\gamma Y = 2\gamma AF(L, K, H, N)$

24. 헥셔-올린 정리(Heckscher-Ohlin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각 국가마다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다르더라도 무역 후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은 균등화된다.  
 ㄴ. 국가 간 생산함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ㄷ. 타국과 비교하여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  
 ㄹ. 국가 간 생산요소의 이동은 자유롭다고 가정한다.  
 ㅁ. 생산요소의 집약도는 역전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25. 먼델-플레밍모형(Mundell-Fleming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지출이 확대되면 IS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 ② 실질환율이 상승하면 IS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 ③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LM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 ④ 국가 간 자본이동성이 높을수록 BP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 ⑤ 실질환율이 상승하면 BP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 정 법

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행정입법에 참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시행령 등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ㄴ.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시험과 관련하여, 시험 실시를 불과 2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시험방식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수험생들의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변경 사항이 응시 수험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이상 개정 시행령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ㄷ. 1945. 8. 9. 이후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 재조선미국 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1945. 9. 25. 공포) 제4조 본문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므로 헌법 제13조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ㄹ. 퇴직하는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라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급여액의 산정기초를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병역법」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ㄷ. 「군인사법」에 따른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의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

ㄹ. 구「공무원징계령」에 따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ㅁ.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 ③ ㄷ, ㄹ, ㅁ
- ④ ㄱ,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3.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건축물 내부에 있는 시설물을 반출해야 할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예고하여야 한다.
- ③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예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의무자에게 있다.
- ④ 위법한 건물이 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에 대한 예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 ⑤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는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지만,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무효확인 의 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 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 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 ②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의 소를 제기하였 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 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 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 더라도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병합 되었다면 그 취소청구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③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 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서는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
- ④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이 현 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소 소송법」 제28조에 따라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 므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개발계획에 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에 대 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 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산림청장이 구「산림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 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다.

ㄴ.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 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새롭게 신분관계의 설정행위가 없는 이상 기존 사립대학 교 원의 신분관계는 사법관계로 인정된다.

ㄷ.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시공상 하자나 재 료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은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택지개 발사업 시행자에게 사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구「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공권력 의 행사로서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6.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 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 로서 당연무효이다.

ㄴ. 행정행위 하자 유무의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 는다.

ㄷ.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의 유 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ㄹ. 행정청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 당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 지가 있다면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 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7.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 외에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 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 ③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기본법」 에 따른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 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 ④ 행정조사의 범위에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 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문서열람 활동이 포함된다.
- ⑤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그 수사절차는 「행정조사기본 법」상 행정조사 절차에 해당한다.

8.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근거법상 소로써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중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취소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용되므로 상고심 계속 중에는 소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함으로써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그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가능하다.
- ⑤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9.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의 이유에서 제시된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다.
- ③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판결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던 제3자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 ④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방법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⑤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입안제안된 내용과는 다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10.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받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구「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단순히 분양계약의 효력을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기본행위인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11. 「행정절차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확약은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확약이 위법함을 이유로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확약이 위법하지 않는 한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된다.
- ④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으나,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는 없다.

1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
- ②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③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행정절차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전자문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⑤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수취 거부 시에 행정청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13.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익사업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권리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사법상의 권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집합제한조치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되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영업시설·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규정의 부재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사업시행자이므로 소송당사자에서 재결청은 제외된다.
- ⑤ 헌법 제23조제3항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은 재산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별 법령에 의해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14.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징계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징계의결이 있는 다음 날부터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③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으로서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 장관으로 한다.
- ④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 하며, 그 행위가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15.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② 헌법은 위임입법의 형식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규율 형식을 선택하여 법령을 제정할 수는 없다.
- ③ 법률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운송사업 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1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를 중대한 교통사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면 해당 대통령령의 규정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 ④ 감사원규칙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 ⑤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16.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②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당연히무효이다.
  - ③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닌 기관위임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 ⑤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도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이 그 설치·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 ③ 하천 관리주체로서는 역사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하천구역에 대해 위험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하천의 현황과 이용 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면 하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 ④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8.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가.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예우배제 결정  
 다.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르. 과세처분과 채납처분  
 모.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바.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모
  - ③ 나, 다, 모
  - ④ 다, 르, 바
  - ⑤ 르, 모, 바

19.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또는 공청회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라도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 ④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20.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 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 ③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 ④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1.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22.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처분의 재심사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②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 ③ 처분의 재심사 신청은 당사자가 처분의 재심사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④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⑤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처분의 재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등과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식품위생법」상 행정청이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 ③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신고의 효력은 일단 발생하며, 그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수리행위가 취소되어야 한다.

2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 ②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④ 「행정심판법」은 적극적 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직접 처분제도만을 규정하고 행정소송에 있어서와 같은 간접강제제도에 관한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⑤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상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와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은 그 상대방, 처리절차 및 공개의 사유 등이 유사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정보공개청구권은 해당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민에게만 인정되며 여기에서 국민의 범위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에 불문하고 포함된다.
- ③ 한국증권업협회는 그 업무가 국가기관 등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 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 행정학

1.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구분과 그 사례의 연결로 옳은 것은?

- 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재정정보원
- ② 준시장형 공기업 - 대한석탄공사
-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관광공사
- ④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 ⑤ 기타공공기관 - 한국소비자원

2.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자본에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 ② 사회적 자본은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한다.
- ③ 사회적 자본은 사용할수록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 ④ 사회적 자본은 정부에 의해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다.
- ⑤ 사회적 자본의 요소에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3. 개방형 직위제도와 공모 직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간인은 개방형 직위제도에 의해서는 임용될 수 있지만 공모 직위제도에 의해서는 임용될 수 없다.
- ②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하며, 공모 직위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한다.
- ③ 개방형 직위제도와 공모 직위제도는 기관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우 임용기간 만료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 ⑤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은 자율사항이나 공모 직위제도의 운영은 의무사항이다.

4. 정책집행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의 불응 정도는 정책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 ② 하향식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은 정책설계자가 정책집행자의 능력과 헌신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 ③ 상향식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은 공식적 정책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집행현장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때문에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 ④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 유형 중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집행자가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적 협상 능력보다는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 ⑤ 매즈매니언과 사바티어(Mazmanian & Sabatier)는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정책목표가 분명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5.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정부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 지방회계의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 ② 중앙정부가 복식부기·발생주의를 먼저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었다.
- ③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 ④ 중앙정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 ⑤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6. 다음 글의 ㉠과 ㉡에 해당하는 정부실패 요인으로 옳은 것은?

- 정부 관료조직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식적 목표이지만 관료들이 자기 이익이나 부서의 예산 확대에만 집착해 재정을 낭비하는 경우를 ㉠(으)로 인한 정부실패라고 한다.
-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라고 한다.

- |   | ㉠      | ㉡        |
|---|--------|----------|
| ① | 내부성    | 지대추구행위   |
| ② | X-비효율성 | 권력의 편재   |
| ③ | 내부성    | 파생적 외부효과 |
| ④ | X-비효율성 | 파생적 외부효과 |
| ⑤ | 권력의 편재 | 지대추구행위   |

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상 기관대립형으로만 기관구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②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③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 ⑤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8.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ㄱ. 직급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의미한다.
- ㄴ. 직류는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의미한다.
- ㄷ. 직위분류제는 서로 다른 직무 사이에 경계를 구분하는 수평적 폐쇄성을 특징으로 한다.
- ㄹ.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보수 및 직무수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에 더 용이하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9. 「국가재정법」상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할 때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환율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 기금관리주체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의 경우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0. 정책과정에서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사회조합주의는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가 보장된다고 설명한다.  
 ㄴ.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이익집단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며 계급, 종족, 언어, 지역에 근거한 정치적인 하위문화는 억압된다고 설명한다.  
 ㄷ. 엘리트론은 엘리트 간의 정치적 경쟁으로 대중의 선호가 최 대한 정책에 반영된다고 설명한다.  
 ㄹ. 무의사결정론은 지역사회의 엘리트들이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며,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대중은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설명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1. 네트워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호 독립적인 조직들이 상대방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수평적 신뢰관계로 연결된다.
- ②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③ 조직 간의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이 중시된다.
- ④ 네트워크조직은 조직 간에도 형성될 수 있고, 조직 내의 집단 간에도 형성될 수 있다.
- ⑤ 네트워크조직은 집권화된 의사결정, 엄밀한 규칙과 절차,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특징으로 한다.

12.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시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행정협의회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성한다.
- 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13.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제도와 제도, 제도와 개인 등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강조한다.
-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나 조직에서 어떻게 유사한 제도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개인은 정치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제도 속에 종속되고 그런 제도를 따름으로써 사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갖게 된다.
-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동형화를 강조하는데,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많은 근대국가에서 베버의 관료제를 채택한 이유는 그것이 효율성을 보장해주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 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넓게 해석하여 규칙이나 절차뿐만 아니라 전통과 관습 그리고 문화를 포함해서 사람의 표준화된 행동을 낳는 것을 제도로 이해한다.

14.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채무를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적 채무로 정의하고 있다.
- ② 국가채무의 기관 포괄범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 및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③ 국가채무는 현금주의 기준에 의해 작성되는 채무 규모이다.
- ④ 일반정부 부채는 국제지침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다.
- ⑤ 공공부문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에 의해 산출되며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된다.

1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재정조정제도에 활용되는 세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재산세  
 ㄴ. 개별소비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담배소비세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6. 공무원 선발시험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분법은 하나의 시험지 내에서 문항만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 문항 집단 간의 성적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이다.
- ② 재시험법은 시험의 종적 일관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험을 본 수험자에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는 방법이다.
- ③ 동시적 타당성 검증은 시험성적과 근무실적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 ④ 신뢰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나, 타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⑤ 내용타당성은 시험성적과 시험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의미하며, 시험이라는 예측치와 직무수행실적이라는 기준 간 상관계수로 측정된다.

17. 드로어(Dror)의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사결정에서 환류 과정을 중시한다.
- ② 합리적인 요소 외에 직관, 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③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특징을 강조한다.
- ④ 수학적·계량적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 결과도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인정한다.
- ⑤ 메타 정책결정 단계는 정책결정 이전에 전반적인 정책결정의 구상에 관해 결정하는 단계이다.

18.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ㄴ. 전문위원은 위원회 소속으로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의회 사무기구 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ㄷ.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모두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ㄹ. 시·도의 경우 전문위원은 4급 및 5급 이하의 직급으로 임명하고, 정책지원관은 6급 이하로 임명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19.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개인의 욕구 중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들을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로 분류한다.
- ②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계층이론을 수정해, 인간의 욕구를 존재(existence), 관계(relatedness), 성장(growth)의 3단계로 구분한다.
- ③ 허즈버그(Herzberg)는 동기부여에 관련된 두 가지 요소로 위생요인과 동기 요인을 제시한다.
- ④ 리커트(Likert)의 관리체제이론은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 간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정함의 정도가 동기부여에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 ⑤ 매슬로우(Maslow)는 한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이전 단계의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 욕구가 새로운 동기를 유발하는 유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20.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임은 중징계의 하나로 한 계급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다.
- ②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직위만 변경하는 것이다.
- ③ 전입이란 인사관할을 달리하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을 말한다.
- ④ 겸임은 직위 및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 ⑤ 전직은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이다.

2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과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비교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기준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ㄱ	정부역할	방향잡기	노정기
ㄴ	공익	개인이익의 총합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ㄷ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전략적 합리성
ㄹ	책임성 확보	시장지향적	위계적
ㅁ	공무원의 반응 대상	고객	시민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22. 성과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서에 사업목적, 기술서가 포함되어 있고 활동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 ② 예산의 배정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므로 예산과 사업의 연계가 가능하다.
- ③ 장기적인 사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명확하다.
- ④ 사업단위에서 선정한 성과목표가 최종산출물이 아니라 중간산출이기 때문에 수단과 목표가 바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⑤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다.

23. 정책네트워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공동체는 특정 집단이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한 영역에서 등장함에 따라 참여자가 유동적이며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 ② 하위정부에서는 정책네트워크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분명하지만, 이슈네트워크에서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시간에 따라 가변적이다.
- ③ 정책공동체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교환할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제한적 구성원들만 자원을 가지고 있다.
- ④ 정책공동체의 경우 정책 산출을 예측하기 용이한 반면 이슈네트워크의 경우 정책 산출을 예측하기 어렵다.
- ⑤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순으로 정책네트워크 참여자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24.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 ②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③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 ④ 공직자의 생활보장
- ⑤ 이해충돌방지 의무

25.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로빈스와 저지(Robbins & Judge)의 갈등에 관한 관점 중 인간관계적 관점(human relation view)은 조직관리자가 갈등의 순기능을 최대화하도록 관리할 것을 강조한다.
- ② 사이먼(Simon)의 갈등 해결방안인 교섭(bargaining)은 관계당사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잠재적인 동맹자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강조한다.
- ③ 조직 내 갈등과 관련해 폰디(Pondy)가 분류한 관료제적(bureaucratic) 갈등은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의미하며, 주로 희소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경쟁할 때 발생한다.
- ④ 갈등 예방 전략이란 순기능적 갈등을 적절히 조성해 조직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보 및 권력의 재분배, 정보 조절, 경쟁 상황의 창출 등이 있다.
- ⑤ 제3자 개입에 의한 갈등관리 방식인 중재(arbitration)는 제3자가 갈등 당사자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려 준다는 점에서 조정(mediation)과 차별화된다.